

“李,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언급”

(이재명)

추미애 당선자, 유튜브 시사 채널 출연...이 대표와 사전 교감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 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에 대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후보 중 한명인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13일 전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표와 미리미리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공연히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다른 후보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다. 다른 후보한테는 왜 나가시지? 그러면서 (의장 출마 결심을 듣고) 막

고개 끄덕끄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추 당선인의 발언은 그간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수(選數), 그리고 나이를 따져온 관례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明心)’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추 당선인(6선)과 경쟁하던 조정식 의원(6선)은 추 당선인보다 나이가 적다. 남은 경쟁자인 우원식 의원(5선)은 추 당선인보다 선수가 아래다.

추 당선인은 조 의원이 사퇴한 데 대해 “저와 가까운 분, 의원들, 또 조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대강 얘기가 거의 됐다”며 “6선 두 분이 관례에 따라 하면 되지 공연히 당내 선거를 굳이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당심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기대를 초반부터 이런 선거를 통해 어지럽힐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설에 대해서

“박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기보다는 제 짐작으로는 조 후보를 도왔던 분들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민을 버리는 쪽의 (여야) 협치라면, 저는 국민을 버리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며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치(民治)”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걸 거부하지 않았느냐”라며 “국민을 거부한 것이 대통령 자리 자체의 책무를 거부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줄 역할로서의 이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 대표 개인이 만약에 쉬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전제한 뒤 “(본인이 연임을 원한다면) 오히려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최자 빠진 5·18 헌법 전문 수록 토론회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8명 주최...민형배·정진욱만 참석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을 위해 제22대 국회 광주지역 8명의 당선인이 첫 주최한 토론회에 정작 본인들은 무더기로 불참했다. 지역에서 예정된 ‘쓰레기 줍기’ ‘방송 출연’ ‘개인사’ 등의 일정 탓에 호남 헌안 문제를 넘어 22대 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외면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과 박군택(광산갑)·안도걸(동남을)·양부남(서구을)·전진숙(북구을)·정준호(북구갑)·정진욱(동남갑)·조인철(서구갑) 등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공동으로 1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민형배 의원과 정진욱 당선인을 제외하고는 6명의 광주지역 당선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동상 국회 토론회의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리고

도 의원이 불참하는 경우는 있지만 해당 지역 현안 문제와 사업이 주제일 경우, 공동 주최 의원(당선인)의 참석은 더욱 뜨겁다. 반면, 이날 광주 당선인 일부는 간담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군택 당선인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처단 간사를 맡아 이날 관련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 등 당의 공식 행사 참여로 간담회에 불참했지만 다른 5명의 국회의원은 간담회 불참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당선인은 영산강 쓰레기 줍기, 지역 방송 출연, 개인적 일정 등을 핑계로 내세웠고 한 당선인은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에 머물다 돌연 오후에 광주 개인일정을 이유로 서울을 떠났다.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한 당선인은 “간담회 취지에 동의하고 같은 생각이다”며 “당선인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당선인 측에서 간담회를 주도하면서 날짜를 선택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주 1회 만남시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고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 식사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 공식 회동했다.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출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었다.

추 원내대표는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며 의회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느낄 텐데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현안을 풀어나가는 인식 방향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소통으로 풀어갈지 기대도 크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하면서 첫 번째는 소통”이라며 “앞으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대화하면 잘 진행되겠다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경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이슈를 꺼냈다.

그는 또 “해방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린다”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제가 혹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반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 식사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가임기 여성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박미정 시의원 조례안 통과

출산을 희망하지만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광주지역 가임기 여성들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민주·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광주시가 난자 주머니인 난포에서 분비되는 항물러관호르몬 농도가 기준보다 낮거나 중위소득 180% 이하인 광주지역 20~49세 여성에게 난자 동결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불임과 난임 누적 환자 수가 181만명을 넘어섰고 총진료비는 1조9471억원에 달한다.

결혼·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으로 난임 경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관련 시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1명으로 2022년(0.84명)보다 0.13명 감소했다. 이는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 합계출산율 감소율 8.1%보다 두 배가량(16.4%) 높다. 개정안 통과로 광주시가 장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대가 모아진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부정행위 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 불이익

채은지 시의원 조례안 통과

연간 1200억원에서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들의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업체가 부정 수급을 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 이익이나 이자를 취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수 또는 다음 연도 재정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민주·비례)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 운송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 사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개정안에 운송 사업자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재정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방안을 규정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은지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최근 감사에서 필수 행정 절차 미이행, 운송 사업자 위반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운송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